

한국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 제시*

Proposed Solutions for Current Proble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Environment' in Korea

도 태 현(Tae-Hyeon Doh)**

〈 목 차 〉

- | | |
|----------------------|-------------------------------|
| I. 시작하는 말 | 2. '도와주세요' 절박한 SOS |
| II. 학문 연구에 대한 성찰 | 3. 공공도서관의 현판 내리기 |
| III.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 4. 새 천년 벽두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 |
| 1. 대학의 강단에서는? | IV. 맺는 말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위기 상황을 구체화시켜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실천성 문제, 학부제 하에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문제, 대학도서관과 전산부서와의 통합 문제,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민간위탁 문제, '도서관 정보화사업 계획' 등을 다루었다.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specify the critical situ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environment' of Korea, and to propose solutions.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s the identity and the practicality of this discipline, the prospect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der the new educational system of the university, problems in merger of university libraries and computer centers, renaming and commission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and the government sponsored 'library computerization project'.

* 이 글은 200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부산대학교 본관회의실, 2000. 6. 23)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I. 시작하는 말

우리 도서관의 토양이 건강하지 못한 위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과 타 직업 군과의 무한 경쟁 상황은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즈음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않으면 도서관과 사서직은 고사되고 말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며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안의 긴급함과는 달리 학계와 현장의 상황 인식은 다소 안일하고 공감대 형성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단견적, 산발적이며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다. 대안을 찾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 먼저 문제의 본질과 긴박성에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그 공감대 위에서 길을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기도 하다. 답답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들추어내고, 자성적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문제의 해답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바로 문제가 발생한 그곳에 있는 것을.

오늘날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위기 상황은 딱히 그 무엇에 기인한다고 꼬집을 수는 없는 복합적인 것이겠지만 현장을 계도해야 할 학문 연구가 그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서관이라는 현장을 가진 문헌정보학이 실천성과 정체성을 결한 결과는 현장을 위한 발전적 정책 도출에도, 건실한 현장을 가꾸기 위한 후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후진성과 여기에 얽힌 구조조정이라는 위협요소는 부메랑이 되어 학문과 강단의 위기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현장의 위기 상황이 모두 학문의 부실에 기인한다거나, 학문의 위기는 현장의 후진성 때문이라는 식의 책임 전가나 소모적 논의는 전혀 유익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우선 어떤 식으로든지 현장의 후진성과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는 학문 연구의 동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성적 성찰을 앞세운다. 그 후에 비록 이러한 학문의 문제들이 전적인 원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문헌정보학의 강단과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급한 사안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II. 학문 연구에 대한 성찰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갖는 문제를 단적으로 지적하면 '실천성'과 '정체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같이 뚜렷한 현장을 갖고 있는 학문의 '실천성'은 학문이 현장을 건강하게 보양하고 계도하는 중대한 책무의 하나이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의 도서관 현장이 건강하지 못한 일단의 책임을 '학문 연구의 동향'에도 묻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1991년과 1992년 2년간 《도서관학》과 《정보관리학회지》에 발표된 63편의 논문을 분석한 최성진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별로 관련되지 않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35건으로 전체의 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책하고 있다.

도서관봉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진 나라에서 수행되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반 이상이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 나라의 도서관 봉사 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논문이 어디에서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도서관이 없어도 문헌정보학 연구가 필요하며 문헌정보학자가 필요할까?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물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나라의 도서관 때문에 존재하고 그 도서관의 봉사 발전을 위하여 일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문헌정보학자들이 무슨 수준 높은 학문을 한다고 위임받은 본업은 제쳐놓고 이른바 외국의 선진 이론들을 따라 다니며 시간과 자원을 탕진한다면 이는 명백히 배임 행위이다.)

이는 그 동안의 학문 연구가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실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과는 우리 도서관의 발전을 정체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이론과 제도의 무분별한 이식으로 '시행착오'의 우²⁾까지 범하였

- 1) 崔成眞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叢史李春熙教授定年記念論叢』, (서울: 記念論叢刊行委員會, 1993), 101 쪽.
- 2)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제도서실이 우리 나라 대학도서관에도 그대로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과제도서실이나 지정도서실들은 그후 대부분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방법, 즉 미국의 대학에서는 과제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대학에서는 교수의 강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빚어진 시행착오였다. 위의 글, 102쪽.

음을 볼 수 있다.

대학에 문헌정보학과의 설치된 때를 기점으로 하면 우리 나라에 문헌정보학이 도입된 지 햇수로 40년 이상 경과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 문헌정보학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채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주변주제로의 파상적 영역 확대가 그 원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대학마다 문헌정보학과의 개설 교과목들이 각양 각색이며 핵심 교과목(Core Curriculum)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도 그 예의 하나이다. 교과목의 유동성에 더하여 컴퓨터와 전자통신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에 대한 필요 이상의 기대와 관심은 급기야 문헌정보학의 실체와 수단을 혼동하는 양상까지 나타내고 있다.

김정근은 문헌정보학의 실체를 “넓은 의미에서의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이라 하고 Allan D. Pratt의 표현을 빌어 “기록자료(graphic records)의 수집-보존-조직-확산(Collection, Preservation, Organization, Dissemination=CPOD)의 연속체”라고 정의하였다.³⁾

그는 또한 그 고유한 실체를 경시함으로써 야기된 문헌정보학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관찰되는 바로는 ‘위기’의 학문을 관리하고 있는 주역들의 행태가 전술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그들은 문헌정보학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일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축적해 온 우리들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도서관적 정신과 기법을 와해시킨다. 과연 우리 학문의 장래가 이와 같은 태도 속에서 보장될 수 있겠는가? 우리 학문의 위기는 그 연구자들이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하는데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

더불어 주변 학문으로의 분예 넘치는 위도는 문헌정보학의 ‘안방 동공현상’을 가져왔다. ‘분류’와 ‘목록’ 같은 문헌정보학의 전통적 영역은 ‘일정 기간 도서관에 들어와 등 너머로도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라는 국외자들의 몰상식과 몰이해를 얼굴도 한 번 붉혀 보지 않고 수용하였으며, 도서관인 스스로도 ‘아웃소싱’(outsourcing) 운운하며 더 이상 이러한 분야는 문헌정보학의 고유 영역이 아님을 공증하여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독서교육은 어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6차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국어과의 독서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자율학습’용 교육부 김정 ‘독서’ 교과서 한편을 본 결과 저

3)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재건 : 전술전환과 관련하여」, 『圖書館文化』, v. 41, n. 1 (2000, 1, 2), 12-13쪽.

4) 위의 글, 12쪽.

자들의 약력에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사실이 전무하다. 또한 책에 포함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은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지나쳐 버릴 정도로 빈약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잘못된 내용조차 실려 있다.⁵⁾

앞서 본 최성진의 연구에 따르면 분석된 논문들 중 주변주제나 타 분야의 주제를 다룬 논문이 전체의 40.6%나 차지하였으며, 연구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밝혀진 주변주제로의 연구 범위 확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⁶⁾

첫째, 도서관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문헌정보학의 핵심주제들은 연구주제로서 이미 진부하여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신한 주제를 찾다보니 소위 주변주제의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요즘 선진국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를 따르다 보니 그런 주변주제의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사회에 맞게 문헌정보학의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첨단기술분야와 관련된 주변주제의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연구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고리타분한 분류 편목이나 도서관경영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최성진은 다음과 같이 단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슬픈 일이다. 우리가 한국의 문화 환경에 맞는 자료조직, 도서관 경영, 기타 도서관 기능들의 원칙과 기술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였기에 그런 주제가 벌써 진부하고 연구할 가치가 적고 고리타분하게까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게 보인다면 그는 이 나라의 도서관 분야의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일 것이다.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가령 분류 편목은 수 천년 동안 있어온 것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도서관 안에 있을 것이다. 그 것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쓸모 없어지고 진부해진 일이 없다. 현재의 목록형식이 현대인에게 맞지 않거나 분류업무를 더 효율화시킬 기술과 도구가 출현하였다면 그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⁷⁾

5) 김봉균, 이석규, 한연수, 『독서 : 고등학교』, (서울 : 지학사, 1999) 이 책의 저자 3인은 모두 사범대학 국어과를 거친 사람들이었다.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 중 KDC를 '미국의 교육학자이며 철학자인 존 듀이 (John Dewey)가 고안한 십진분류법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고안한 것'이라고 하는 등의 잘못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6) 崔成眞, 앞의 글, 91-92쪽.

7) 위의 글, 91쪽.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3호)

정보기술과 인터넷 만능에 대한 환상은 가까운 장래에 인쇄매체는 박물관 자료쯤 될 것이며 도서관은 '사이버 공간'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급기야 실물장서 무용론을 들끓게 하고 도서관으로부터 '보존'과 '소장'의 기능을 제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본격적 디지털정보시대에 종자 자본의 고갈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전통적 학문의 실체를 다 내어준 마당에 도서관의 사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사이버 공간'의 여행 안내자로서 변신하면 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등 너머로 배울 수 없는 고유한 '지식'인가? 정보기술의 보급이 대중화, 보편화된 후에도 사회적 존재가치를 충분히 인정받는 직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컴퓨터로 대변되는 기술과학 만능의 시대적 풍조에 집단 마취된 듯 정보기술 쪽으로만 몰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인문학적 비판 능력과 가치의식이 마비된 현대를 경고하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기초 인문학 경시 풍조가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발 독재시절 억압받았던 인문학이 요즘은 세계화 바람에 놀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를 첨단기술·생명과학·인터넷·벤처 등과만 연결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철학·역사학·사회학 등의 지혜와 감시가 없다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

우리 체제가 공산당과는 다르지만 인문학 침체가 가치상실과 사회쇠퇴라는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91년 8월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에스토니아 신임 외무장관 렌나르트 메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공산당의 억압으로 우리는 비판 능력과 인간 가치 의식을 갖춘 새 인간을 키우지 못했어요. 비판적이지 못한 인간은 정교한 현대 과학기술을 지혜롭게 다루지도 못합니다."⁸⁾

문헌정보학 학문분야의 자성적 움직임에 대하여는 지난 4. 22. 개최된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회에서도 한차례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 논의된 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⁹⁾

8) 安瑛燮, 「인문학 경시의 代價」《중앙일보》, 2000. 7. 1, 7면.

9) 김영기, 「한국문헌정보학의 실천성 논의」, 《한국문헌정보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9집(2000. 4. 22), 27-46쪽.

첫째, 한국에서의 문헌정보학 연구는 대체로 미국 학문의 영향하에서 답습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헌정보 현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 절실하고 기본적인 논제를 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연구 방법론의 편향성은 도서관 현장의 심층적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어내는데 실패한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동안 보편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수량적, 통계적 연구방법만으로는 도서관 현장과 그 환경에 묻혀있는 문제의 본질을 읽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셋째로, 딱딱한 과학주의적 문체의 논문 형식의 글쓰기는 도서관 현장에 배태되어 있는 드라마를 그대로 노출시키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의 사서들에게 재미있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문체를 실험하고 이를 '잡스러운 글쓰기'로 표현하였다.

Ⅲ.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일찍이 구한말부터 이 땅에 설립되기 시작한 근대적 도서관은 그 이념을 채 구현해보기도 전에 일제 강점기를 맞게되었고, 일제의 한민족 민족정신 말살이라는 왜곡된 도서관 정책은 이 땅에 도서관 문화가 제대로 착근할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 손에 접수된 도서관은 선각한 몇몇 도서관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근근히 꾸려져 왔지만 이마저 경제개발 우선 논리의 뒤 안에서 숨죽이며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을 뿐이었다.

현대적 문헌정보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 사서들의 배출 증가와 이들의 도서관 현장 유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점진적 증대는 그 동안의 비전문적 도서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이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에 그쳐서는 안되며 민주사회에서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평등한 제공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적 장치로서 제대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재적 상황은 사회 문화적 환경이 차츰 성숙되고 정보와 지식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회 문화적 관심의 제고는 도서관 발전의 절대 명제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에 대한 몰이해와 전통적 도서관 영역 잠식을 위한 주변 환경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말하자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한국의 문헌정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짧은 시간에 모두 털어놓고 정리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것들이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선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들어 구체화시켜 보고자 한다.

1. 대학의 강단에서는?

대학도 거국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구조조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여파는 ‘학부제’라는 새로운 학제의 전면 실시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제의 복잡한 의의는 차치하고 개별 학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존속하라는 요구이며, 개별 학과나 전공들은 각자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학부제 실시 이후 야기될 전공별 학생 편중 현상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학과일수록 발등의 불이 되었다.

문헌정보학과는 어떤가? 그 동안 학문의 과도한 ‘공격경영’¹⁰⁾은 필요 이상으로 다양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돌아왔다. 문헌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과의 본질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며,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에 대하여 손에 잡히게 확실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이는 문헌정보학의 파상적, 산발적 영역 확대가 가져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 외화내빈이랄까? 이렇게 하여 우리가 손에 넣은 구체적인 것이 별로 없는데 비하여 문헌정보학의 전통적 영역은 경시되거나 무시되었으며 그 틈에 타분야에서 이미 여기까지 손을 뻗치고 있음이 감지된다. 앞서 보았듯이 독서교육은 국어과에서, 목록이나 색인은 컴퓨터 분야에서, 또한 교육매체는 교육공학에서, 문서나 기록물 관리는 행정학이나 역사학에서 ...

감당하기 버거운 학문 영역의 확대에 대하여 최성진은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흔히 자기가 하는 학문도 다른 학과의 교수들이 하는 학문처럼 학문성이 높았으면 하고 바란다. 어떤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믿고 또 학문성이 높은 분야로 보이기 위하여 무리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은 본래 봉사전문직 안에서 그 발전을 위하여 생겨났으며 처음부터 (학문성이 높은) 학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 문헌정보학자들은 그들이 하는 학문의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¹¹⁾

10) 김정근은 “이 땅의 문헌정보학연구자들이 한편 ‘정보’와 ‘컴퓨터’를 앞세우고, 다른 한편 ‘도서관’을 평가절하 하면서 오로지 21세기 정보시대, 지식기반사회를 노래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일종의 ‘공격형 경영’이라고 표현하였다. 김정근, 앞의 글, 11쪽.

11) 崔成眞, 앞의 글, 101-102쪽.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문헌정보학의 양상은 그 정의가 확고하지 않을 만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문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우선 전체 학문의 체계에서 그 소속이 모호하게 되었다. 이것이 학부제 하에서 문헌정보학이 갖는 첫 번째 딜레마이다. 어떤 전공 영역들과 결합하여 학부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게 되었고 결과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학부에 소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문헌정보학과는 필요하다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의 어디에도 맞춰 넣을 수 있는 그런 유의 학문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는 학문의 정체성 확보에 실패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던지 간에 소속된 학부 내에서 문헌정보학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낙관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강단이 학문의 수요처인 사회현장과 직결되어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 현장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결국 도서관 현장의 후진성은 대학의 강단에 그에 상응하는 파장을 가져온 것이다.

학문의 기본 골격과 성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의 부족, 실천의 장인 도서관의 후진성은 결과적으로 문헌정보학의 확고한 위상 정립을 저해하고 학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대학의 학부제 하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학과의 존립 기반과 직결된다.

따라서 학문과 학과의 존립 기반으로서 학문의 정체성 확보, 건강한 도서관 현장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이며,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2. '도와주세요' 절박한 SOS

...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학생들과 학술정보처장님, 문헌정보팀장님과의 실습 마지막 날에 있었던 간담회에서의 대화 내용입니다. ... 간담회 하면서 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실무실습에 대한 소감을 말해 보라구. '편목', '분류', 'MARC 입력' 등등에 관해 말씀드리니까 자기는 도서관 쪽에 대해선 모른다면서 문헌정보팀장님을 모셔오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됐죠. 우리학교 도서관 이름이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정보관으로 개명된 것이 99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서 도서관실무실습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학술정보관이란 이름보다는 도서관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처장님 : 자꾸 도서관, 도서관 하는데 지금 이 학술정보관은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야 ...

팀장님 : 학술정보관은 도서관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

팀장님 : ... 앞서가는 학술정보처를 문헌정보학과에서 발목잡고 있다니까. 교수님들도 착각하고 있어. 문헌정보학과하고 학술정보관이 깊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그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것도 아니야 ...

저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학술정보관하고 문헌정보학과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학술정보관하고 도서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릴 왜 실습생으로 받으신 겁니까? ... 12)

저는 H군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Y입니다.

이렇게 도메리 회원 여러분들께 글을 띄우게 된 이유는 우리 도서관이 올 연말까지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신 여러 사서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제 막 발돋움하려는 우리 도서관을 행정 당국에서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및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도서관은 사서가 저 포함 3명 있으며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맞서 싸우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요청하오니 많은 참고될 만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도서관은 사서가 지켜야한다는 것을 꼭 보여 주고 싶을 뿐입니다. 꼭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13)

먼저의 글은 전산 부서와 같은 유관 부서(?)들과 함께 학술정보처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통폐합된 대학도서관이 서서히 위축되어 가는 과정을 바라보며 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의 절규이며 뒤 글은 공공도서관 민간 위탁 추진으로 맞서 싸울 기력조차 잃은 어느 현장 사서의 구조 요청이다. 이 글들은 모두 전자메일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근거로 삼기에는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발언을 문제 삼아 특정 개인을 매도할 의도도 없다.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예비사서를 포함한 도서관인들의 무력감과 박탈감이 심정적으로라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옮겨보았다.

서로 다른 데서 출발한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현재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고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왜곡되어가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에 의하면 현황이 개재된 88개교 중 16개교의 도서관이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관’, ‘학술정보처’, ‘학술정보센터’, ‘정보관리처’, ‘종합정보센터’, ‘정보지원처’ 등의 명칭으로 변경 또는 통폐합되었으며¹⁴⁾ 이러한 현상이 여기에서 그치

12) 학생 J, 「문헌정보학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http://delias.donggeui.ac.kr/ mailing/ messages/ data1/6266.html>(2000. 4. 30))

13) 사서 Y, 「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사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http://delias.donggeui.ac.kr/ mailing/ messages/ data1/6000.html>(2000. 3. 30))

14)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원교편람 : 2000년』, ([대구] : 동협의회, 2000)에서 집계.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도서관이 이러한 기관의 하위 한 부서로 예측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기능의 위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어떤 이는 도서관이 이렇게 거창한 이름 아래 하나의 부서로 축소 통합되더라도 대학 당국의 관심이라도 끌게 된다면 오히려 실보다 득이 클 것이라고, 또는 이것을 우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환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다.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탓인지! 이 글의 서두에서 나는 <정보센터>의 구조조정이 정보유통의 전문가로 자칭하는 우리 같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이어, 대학도서관의 구조조정 또한 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논리와 정보기술로 무장한 타 분야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와 하였다. 그들이 <학술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그 주도권을 도서관 사서에게 혹은 문헌정보학과 교수에게(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흔쾌히 넘겨주리라 생각하는가? 아니 스스로 넘겨주지 않는다면 빼앗긴 영토를 싸워서라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5)

이용남은 도서관과 전산부서의 조직통합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16)

- 1) 양 기관의 사회적 의미, 역사적 존립기반의 차이
- 2) 도서관의 자원을 digital 정보 위주로만 간주하게 될 가능성
- 3) 화학적 통합이 아닌 기구만의 물리적 통합 염려
- 4) 도서관과 전자계산소 요원의 직종간의 이질성 문제
- 5) 한국적 여건
 - 정보지상주의적 조급성
 - 지식자원과 정보접근 개념의 토대(실물장서)의 취약성
 -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상대적 몰인식성

15) 이제환,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圖書館學論集》 第28輯(1998 여름), 514 쪽.

16) 이용남, 「대학도서관과 전자계산소의 통합에 관하여」, (<http://www.hansung.ac.kr/~home07/hlisWEB/matl1study/weeklyboard/files/전산소1.hwp>(2000. 6. 17))

- 논리와 원칙보다는 환경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경박성
- 조직감량 및 구조조정 위주의 실적용 접근 위험성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이들 양 조직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 학문이 애타게 불러왔던 '컴퓨터 연가(戀歌)'의 자승자박인가? 특히 전산부서와의 통폐합은 근본적으로 도서관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전산부서의 업무와 중첩되거나,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통신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도서관 운영이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의 논리에 지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과적으로 '기록 자료의 수집, 보존, 조직, 확산'이라는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에 따라 인류의 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 우리의 이념은 허공을 가르는 공론(空論)이 되고 말지도 모른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는 위 대학도서관의 문제보다 더욱 구조적인 것이다. 공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민간 조직에 위탁함으로써 해결해 보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¹⁷⁾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민간위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상황은 <표 1>과 같다.¹⁸⁾

17) 효율적 정부구현 목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공공도서관’도 민간위탁 대상으로 예시되어 있음. 이용훈, 「공공도서관 위기의 원인과 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 200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 토론회자료(2000. 6. 23-24), 24쪽.

18) 위의 글, 25쪽.

<표 1> 지방자치단체별 민간위탁 추진사례

지역	추진 상황	비고
서울	1999년 3월 개관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신규 개관임에도 인력확충이 불가능함에 따라 중랑문화원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음.	
광주	1997년 3월부터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3곳을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적극 추진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대기업 문화재단 등이 공익법인의 설립형식으로 도서관운영에 참여할 때까지 민영화 방침을 유보. 2000년 6월 신규 개관하는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민간위탁 조항 삽입되어 있음.	시민단체, 언론, 도서관계의 적극적 반대가 유리하게 작용
경기	의정부시 1995년 9월 1일 시설관리공단에 문예회관,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등과 함께 의정부시립도서관 운영이 위탁됨	
	파주시 1998년 4월 3일자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시민회관과 함께 3개 도서관(금촌, 문산, 법원)을 운영위탁	
	동두천시 1996년 동두천시설사업소에 도서관운영 위탁	
	안산시 2002년까지 운영 중인 도서관을 공단이나 민간에 위탁	
	의왕시 시립도서관을 재활용센터 등과 함께 민간위탁 준비 중	
	화성군 2000년 현재 태안도서관 위탁 추진	
충북	옥천도서관이 지역 청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전남	1997년 8월 정읍시립도서관 신태인분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나 취소되었음.	
경북	문경시가 1997년 12월에 문경시립도서관을, 1998년 5월에는 문경새재도서관을 문경시민문화회관에 운영 위탁	
경남	진주시 1998년 3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조례 개정.	
	창원시 1998년 9월 30일 도서관 민간위탁 계획 발표,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 가능토록 함	

1998년 12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 경남 창원시의 경우 도서관 민간위탁 구상의 계기가 된 것은 '국제종합경영연구원'의 경영진단 결과 드러난 창원시립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공공시설 평가 적용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준공공서비스로 서비스의 공급원칙은 효율성(공정성)에 따라 제공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요금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⁹⁾

그러면 그토록 기를 쓰고 관철하였던 공공도서관 입관료 폐지는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복잡한 경제 용어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보의 사유재화 현상으로 정보 소유의 편중이 경제적 빈부

19) 창원시, 「창원시 공공시설 기본운영전략」, 1998, 124-128쪽, 양재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 주민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 부산대학교, 2000, 130쪽에서 재인용.

의 격차까지 심화시켜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평등한 정보제공을 보장해야 할 마지막 보루이다.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유효화는 공공도서관의 근본 이념과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대학도서관의 유관 부서와의 통폐합이나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영 합리화, 쉽게 말해 예산절감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이는 도서관이 그저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을 때 뒤따를 중차대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극심한 손실을 간과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우리 도서관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였는가를 자문해볼 일이다.

3. 공공도서관의 현판 내리기

작년 7월 1일 서울 마포, 고덕, 중계, 영등포도서관에서는 일제히 ‘현판식’이 열렸다. ‘도서관’이란 간판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 행사였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그러나 속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1991년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97년 1월 1일부터 공공도서관 관장을 반드시 사서가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상당수 도서관의 관장 자리는 사서들 몫이 아니었다. 행정직 공무원을 관장으로 앉힌 채 2년 반이나 ‘위법행위’를 해온 도서관들은 ‘이름을 바꾸자’라는 빅 아이디어를 냈다.²⁰⁾

공공도서관의 현판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주민의 평생학습을 돕는 것이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 역할의 중요한 부분임을 천명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굳이 외면하고 ‘평생학습관’이라는 전대 미문의 작명을 한 것은 ‘평생학습관’의 당위성보다는 ‘공공도서관’이란 명칭만은 피하여야겠다는 구차한 구실이며 위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찾아낸 공여지책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도서관 명칭변경과 관련한 이러한 힘 겨루기는 비단 이것이 시작이 아니었으며, 최근 다시 시작된 평생학습관으로의 개명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시작된 ‘개명’은 선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그들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명칭변경과 관련한 그 동안의 상황을 알아보면 <표 2>, <표 3>, <표 4>와 같다.²¹⁾

20) 「도서관에 새바람을 : (2) 정책주체 일원화해야」, 《조선일보》, 2000. 3. 18, 24면.

21) 이용훈, 앞의 글, 22-23쪽.

<표 2> 1998년 이전 명칭이 변경된 도서관

현 명칭	변경전 명칭	변경시기	운영주체
고양시문예회관	고양시도서관	1996.12.	시청
구리시민수련관	구리시립도서관	1996.9.	시청
충청북도학생회관	충북학생도서관	1992.1.	교육청
제천학생회관	제천학생도서관	1997.1.	교육청
군산청소년회관	군산시립중앙도서관	1995.1.	시청
광양시문화체육관리사업소	광양시립도서관	1996.1.	시청
서귀포시종합문예진흥사업소	서귀포시립도서관	1996.2	시청

<표 3> 98년 이후 명칭변경과 관련된 상황

지역	추진상황	비고
서울	시교육청은 1998년 하반기 6개관 명칭변경 추진, 12월 4개관(1분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1999년 7월 15일자로 4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4개관(마포(아현분관),영등포,고덕,중계) 변경
대구	시교육청은 8개관 중 4개관이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단체 반대로 유보 중	유보
인천	시교육청은 1998년 9월초 3개관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무산됨. 그 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것을 빌미로 계속 추진하였으나 2000년 6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임	명칭변경 없이 문제해결
울산	시교육청은 1998년 11월 1개관을 평생교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 시의회 등의 부정적 견해로 유보	유보
강원	1998년 9월 1일자로 춘천시립중앙도서관이 강원평생교육정보관으로 변경	변경
전남	1998년 1월 목포시립도서관이 목포시문화시설사업소로 변경됨. 1998년 6월에는 고흥공공도서관이 전남고흥사회교육관으로 흡수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됨.	변경
전북	도교육청 소속 정읍공공도서관이 1998년 4월 정읍학생복지회관으로, 이리공공도서관은 1999년 12월 마한학생종합회관으로 흡수 통합됨.	변경
경남	거제공공도서관을 1998년 신축, 이전하면서 거제교육정보관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나 도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음.	추진

<표 4> 명칭이 환원된 도서관

현 명칭	변경전 명칭	변경시기	환원시기
완도군립도서관	완도교육문화회관	1995.11.22.	1997.6.5.
익산시립도서관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	1996.3.	1998.10.9.

과거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을 고수하면서도 도서관의 활성화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이 그 책임에는 둔감한 채 자리에 연연하여 벌이는 이러한 기도가 여기에서 그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4. 새 천년 벽두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

2000년 2월 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은 도서관이다. 우리 도서관은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관련 부처가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첫 대책회의에서 2005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들여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을 정보화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2월 23일 2차 회의를 거치면서 2002년까지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²²⁾

그러나 3월 15일자 국내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된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3,068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시설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사업의 골자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료 전용공간 설치. 2002년까지 381개 공공도서관과 215개 학교도서관, 160개 문고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한다. 도서관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곳에선 도서관이 구축한 각종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CD-ROM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화. 전국 도서관이 소장한 9,700만 책의 목록과 주요 문헌 100만 책의 목차를 올해 안에 DB로 구축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DB구축위원회’는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30만 책을 선정하여 주요어·초록·원문 DB(원문 DB는 2002년까지 38.5만책 구축계획)를 2001년부터 서비스한다.
- (- ‘공동목록시스템’을 통한 각 도서관자료 DB의 통합검색 추진

22) 「문화공간」 외면하는 공공도서관 : 여전히 ‘공부방’신세 ... 도서관정보화사업도 정부 ‘실적주의’ 흐름 우려 커, 《주간조선》, 2000. 3. 9, 56쪽.

-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저작권 기반 마련 : 민간 저작물은 저작권 및 출판시장 보호를 위해 도서관내 열람은 무료로 하되 인터넷을 통한 관외 열람 및 인쇄는 유료화 검토)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국립중앙도서관을 디지털정보 공급센터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한다. 투자가 미흡했던 전문용어사전, 다국어사전 등 디지털도서관의 기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 사서를 정보화 전문가로 육성. 현재 각급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500명의 기존 사서를 대상으로 정보화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의 사서자격제도는 디지털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사서를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직으로 양성한다.²³⁾

도서관계의 끈질긴 설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무관심과 몰이해의 수렁에서 홀대받아 오던 도서관이 최고 통치자의 지원에 힘입어 과격적으로 국가적 관심의 전면에 나설 수 있게된 것은 반갑다 못해 감격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의 실행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보듯이 예산의 삭감 등 여러 문제들을 아무리 양보한다하더라도 도서관 정보화의 개념과 우선 순위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보화의 기초'가 경시되고 '정보화의 환경조성'에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인이 아닌 사람의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는가 보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정보화를 위한 장비와 운영요원 확보 등 정보화 환경 조성에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1,700억 원이 들어가고, 도서목록과 목차, 원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 내용에 1,200억 원,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기반분야 연구개발에 120억 원을 쓰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도서관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컴퓨터 등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계획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중요한 점을 빼놓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우리의 도서관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서관 자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정보화가 진행되면 책을 보러 도서관에 찾아가갈 필요가 없어 편해지긴 하겠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긴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밖에 없다.

23) 「도서관 정보화 계획」의 의미와 내용, 《대한매일》, 2000. 3. 15, 31면. ()안은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화추진종합계획(안)」,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자료(2000. 3. 3), 6-9쪽에서 보충.

디지털화 한 자료는 전송 편집 등 가공이 자유로워 종래의 인쇄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다. 그럴수록 그럴만한 내용이 중요해진다. 프랑스는 기존의 훌륭한 국립박물관을 두고도 30억 프랑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프레 그랑 비블리오테크를 건립했다. 95년에 완공된 이 곳에는 문자·소리·이미지 등의 디지털 자료만이 아니라 기존의 방대한 인쇄자료들이 집대성됐다.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에 맞게 분류시스템을 개편하고 목록과 내용을 전산화하고 있다. 정보자본 시대에 대비한 자본축적의 것이다. 도서관마다 디지털 자료실이 생기고 안방에서 도서관의 자료를 조회하는 것도 좋지만,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정신문화와 지식 자산이 제대로 축적되어야 한다. 도서관을 정보화 함에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앞서 보이지 않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²⁴⁾

이는 정보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운송 수단으로 하여 유통시켜야 할 실제 상품(즉 '내용(콘텐츠)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 디지털 시대에 내용정보의 중요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직도 느낌이 와 닿지 않는다면 빌게이츠나 손정의 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향을 눈여겨보면 그 추이를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우리의 정책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언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부 오지철 문화정책국장은 “애초 (공공도서관 정보화)계획엔 장서 구입비 항목이 있었으나 예산 쪽(기획 예산처)에서 '정보화에 장서란 개념은 불필요하다'면서 예산 배정을 거절했다”면서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²⁶⁾

1998년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전국 330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비 총액은 134억 원 남짓 하며 연간 증가 도서 수는 1,980,168책으로 집계되었다.²⁷⁾ 보다 구체적으로 감각하기 위하여 도서관 수대로 나누어 보면 일개 관 당 자료비 4천만 원 남짓, 증가 책 수 6,000책 정도이다. 학교도서관 환경의 열악함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목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무슨 사정이 그리 크게 달라질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아 일부 원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서관 서비스의 유료화가 거론될 것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24) 「사실 : 도서관정보화, 내용이 먼저다」, 《한겨레신문》, 2000. 3. 16, 4면.

25) 손정의씨와 빌 게이츠, IBM 등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업동향에 관하여는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병현, 『디지털은 자본이다』, (서울 : 나남, 1996), 85, 88-89쪽.

26) 「문화공간 외면하는 공공도서관」, 앞의 기사, 58쪽.

27) 이 통계에 별도의 설명이 없지만 연간증가도서 수에는 기증 도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98』,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8), 10-11쪽.

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치명적 병폐로 지적될 수 있는 정보의 편중성을 부채질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른다면 도서관은 무용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원문정보 제공의 유료화는 도서관을 경유할 필요도 없이 출판사로부터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출판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도서관 정보화는 컴퓨터화, 네트워크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기본의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따라서 우선 순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도서관 정보화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지'인가 '무능'인가?

IV. 맺는 말

지금까지 문헌정보학문과 그 현장에 막연히 감돌던 위기의 실체를 구체화시켜보려고 하였다. 이들을 영역별로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의 장을 가진 학문으로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과 실천성의 결여는 어떤 식으로든 현장의 후진성과 위기에 원인을 제공했으며 현장의 위기 문제를 논의함에 앞서 학문 연구의 자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학문의 기본 골격 와해와 무리한 영역 확대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대중화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의 위상을 가변화 시켰으며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무차별 '주변학문 끌어들이기'는 다른 한편으로 문헌정보학의 전통적 영역 동공 현상을 불러왔으며, 정체성을 결한 학문의 자위 능력 상실은 역으로 타학문의 '식민지' 통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학문의 실천성 결여는 도서관 현장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현재 도서관 현장이 당면한 문제는 도서관 자원의 수집과 관리의 후진성, 밥 그릇 찾기에서 존립 기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공공도서관이 '창씨 개명'과 위탁 관리에 이르게 된 형편이 그것이다.

도서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는 대안은 다소 막연하고 만시지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학계와 현장이 연대하여 각자의 선 자리에서 현재를 직시, 자성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우리의 학문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일 것이다.

‘정체성’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본질을 의미한다.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이란 역시 우리 사회의 문헌정보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문헌정보학이 추구해야 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

이 글의 요지가 「2000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될 당시 다수의 토론자들과 참가자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도입과 함께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들을 한 바 있다. 사회적 장치로서의 도서관과 이를 후원해야 할 문헌정보학이 범사회적 전환기에 이에 부응하여 변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답은 ‘정체성의 확립 위에서’라는 말로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의 확립 없이 환경에 따라 마구잡이로 변하거나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 즉 변해서는 안될 본질의 훼손은 ‘변질’이며 ‘존재의 부정’이 될 것이다. 환경이 바뀌면 도서관이 평생교육관도, 어린이집도, 노숙자를 위한 쉼터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과 전산부서의 통합 문제도 이러한 문제와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컴퓨터나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도서관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의 통합으로 야기될 ‘변질’의 문제이다. 이들 양 조직의 통합은 도서관 봉사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정보기술, 다시 말하면 전산부서에 도서관이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는 도서관의 논리가 아닌 정보기술의 논리에 의해 도서관이 운영되는, 즉 도서관의 본질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나는 근래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였던 직업군 사이의 힘 겨루기들을 보며 도서관과 전산부서의 통합에서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았다. 통합된 학술정보원 내에서 두 직종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련만 여기서도 두 직종간의 힘 겨루기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통합 후 두 직종간에 알력이나 주도권 다툼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두 직종 중 어느 한 쪽이 힘을 행사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클까? 그 답은 곧 이 기관이 누구의 주도로, 논리대로 운영될 것인가, 어느 편의 입김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사서직의 주도로, 도서관적인 정신에 따라 운영될 것 같지 않은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학문의 실천성이란 “현실에 대한 학문의 유용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말은 학문이 도서관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거나 현장의 업무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원인으로서는 1) 우리 분야의 연구가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했으며, 준거의 틀을 서양으로 삼은 경향, 즉 연구주제가 우리의 도서관 현장에 적실하지 못했으며 2) 연구방법론 상의 문제로서 구조화된 설문조사나 통계적 분석에 편향적으로 의존한 것, 3) 우리 분야의 글쓰기 대중화 실패와 여론 조성을 위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 되어 도서관의 사회 문화적 기능에 관한 여론과 행정 당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실패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답은 문제 있는 그 곳에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안은 간단하다. 앞으로 학문 연구의 상당부분은 우리 도서관 현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입을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도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타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같이 글쓰기의 대중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말머리를 현장의 도서관인들에게로 옮겨 보자. 이제껏 학문이 현장의 문제를 방기한 책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의 도서관인들은 자신의 삶터를 제대로 보전하고 가꾸기 위하여 주체적 입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 학문과 대학만을 닦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의태심은 없었는가? 양비론이라고 시비할는지 모르지만 현장의 도서관인들도 학계와 더불어 우리 도서관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양질의 봉사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제환의 말을 빌어 보자.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모두 다 힘들지만 어떠한 기관은 살아남고 어떠한 기관은 퇴출된다.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 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고정 고객이 수적으로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대단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그 기관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 그 고정 고객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라. 왜냐하면 그 기관은 이미 그 고객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있으므로, 만약 없어진다면 그 고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 저만하지 않을 터이니까. 그 기관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퇴출 조치에 항거할 것이다.²⁸⁾

이용자의 강력한 후원이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 우리의 서비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28) 이제환, 앞의 글, 522-523쪽.

또 하나, 현실적 위상과 관계없이 현장의 도서관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얼마나 자긍심(자존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을 갖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전문직을 자임하고 이에 부합하는 양질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학문 연구자 못지 않게 현장 문제의 연구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앞서의 학술토론회에서 ‘맞춤 교육’,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사서 양성’, ‘날으는 현장기는 학문’, ‘컴퓨터 기술 관련 교육’ 등등의 표현으로 대학을 향한 현장의 다양한 주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들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현장의 도서관인들에게 되돌아가야 할 주문도 내재해 있음을 인지해야겠다. 작금의 이 나라 도서관 문제들이 모두 학문과 대학에만 귀책 될 수는 없으며 현장 사서들의 몫이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감당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은 대학에서 배출된다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실무와 끝없는 수련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다. 법과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판·검사가 되는가? 전문의를 배출하는 의과대학을 본 일이 있는가? 모두 연수과정이나 현장에서의 수습과정을 거쳐 길러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문직 사서도 도서관 현장에서 앞선 선배 전문직 사서들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현장의 도서관인들 자신에게 있음을, 또한 이 사명을 떳떳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그리고 스스로도 명실 상부한 전문직이 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함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서관 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전술과 전략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도서관인들이 투철한 직업의식과 이에 기반한 결속력은 공고한지, 도서관 정책이나 법규, 예산을 담당하는 당국을 설득하는 통로나 전략은 있는지 자문하여볼 일이다.

건국이래 도서관 관련 최대의 사건이라는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의 발단은 2000년 1월 30일자 한 공영방송의 뉴스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중심기지라는 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이 집중 보도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보도된 바²⁹⁾ 있다. 사회적 관심의 음지에서 고사의 위기에 내몰린 공공도서관을 사회적 관심의 전면에 내세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었다. 도서관의 사회적 의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고도의 전략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분야에 좀 더 일찍이 눈을 돌려 연구하고 전략을 구상했다더라면 새 천년 벽두에 맞은 도서관 도약의 호기에 도서관계가 보다 능동적이고 전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9) 「문화공간 외면하는 공공도서관」, 앞의 기사, 56쪽.